

대한민국 임시정부

3·1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공화국

1919년 ~ 미상



1 각지에 수립된 임시정부와 통합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과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는 물론 중국의 간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미국의 한인사회에서도 독립만세시위와 독립선언이 일어났다. 독립국가 수립 열망은 곧바로 국내외 각지에서 독립국가 건설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때의 정부 수립은 정식 정부를 수립하기 이전 단계인 '임시정부'였다. 임시정부 수립이 추진된 곳은 국내의 조선공화국(朝鮮共和國, 세칭 漢城政府)과 신한민국정부(新韓民國政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였다. 이외에도 실체는 확인되지 않으나 살포된 전단이나 보도기사 등에만 나타나는 이른바 '전단정부(傳單政府)'도 약 3~4개가 찾아진다. 물론 임시정부 수립의지는 이전에도 나타나고 있었다. 1910년 미주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에서 주창한 무형국가론(無形國家論)과 1917년 상해에서 신규식(申圭植) 등이 주장한 대동단결선언(大同團結宣言)을 통해 '제국'이 아닌 '공화정(共和政)'에 입각한 '민국' 건설을 천명하였으나 국가 수립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중 가장 먼저 임시정부 수립을 표방한 곳은 러시아 한인들을 총괄하던 전로한족중앙총회(全露韓族中央總會)였다. 전로한족중앙총회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곧바로 정부 수립에 착수하였다. 1919년 2월 니콜리스크(현 우수리스크)에서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를 조직하여 임시정부로서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하고 3월 대한국민의회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어 국내에서도 3월 초부터 임시정부 수립을 추진하여 4월 13도 대표자회의와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임시정부를 선포하였다. 이른바 한성정부(漢城政府)이다. 또한 상해에서도 1919년 초부터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상해로 건너온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프랑스조계에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19년 4월 10일 29명의 대표자들이 모여 '대한민국임시의정원(大韓民國臨時議政院)'을 결성하였다. 임시의정원은 오늘날의 입법기관인 '국회'에 해당한다. 임시의정원은 첫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는 한편, 정부 조직과 내각 구성원을 선출하고, 헌법에 해당하는 '임시헌장'을 선포하였다. 이로써 대한제국이 멸망한 지 9년 만에 '제국'에서 '민국'으로 전환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것이었고, 해방 이후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상해의 임시의정원은 미흡한 정부 조직을 체계화하는 한편, 제4회 회의에서는 한성정부·대한국민의회 등 다른 임시정부 조직과도 통합을 의결하였다. 임시정부 통합 노력은 1919년 5월 내무총장으로 임명된 안창호(安昌浩)가 미국에서 상해로 오면서 급진전되었다. 안창호의 역할로 상해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를 동시에 해산하고 13도 대표가 조직한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여 새롭게 의회를 구성하자는 통합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정부의 위치는 당분간 상해에 둘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국민의회는 8월 30일 총회를 열고 해산을 선언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임시의정원은 제6회 회의(8. 18~9. 17)에서 통합 정부에 걸맞은 임시정부 개조와 제1차 개헌을 단행하고 9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공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통합 임시정부가 발족하였다.

2 상해시절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

통합 임시정부가 출발부터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대한국민의회를 이끌었던 문창범(文昌範)은 상해 임시정부 조직이 한성정부 개조 수준에 그치자 이에 반발하여 내각 취임을 거부하였고, 신채호(申采浩)를 비롯한 무장투쟁세력은 이승만(李承晩)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그의 위임통치(委任統治)를 비판하면서 북경으로 돌아가 버렸다. 결국 안창호의 설득으로 11월 러시아의 이동휘(李東輝)가 국무총리로 취임하면서 불완전하나마 통합 정부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7부 1국 체제로 조직된 임시정부는 통일·군사·외교·교육·사법·재정 등 다양한 방략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그 중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안창호의 주도로 실시된 연통제(聯通制)와 교통국(交通局)의 설치였다. 이를 통해 국내의 행정을 장악하고 교통망을 확보하여 임시정부의 통신 연락과 주요 거점으로 활용하였다. 이 연통제와 교통국은 선전활동과 군자금 모집,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거점 조직 확보와 함께 임시정부는 1919년 12월부터 군사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는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같은 해 말 상해에 육군사관학교를 설립하고 3기생까지 모집하였다. 또한 공군 창설을 위해 비행사 양성을 추진하여 군무총장 노백린(盧伯麟)이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주 윌로우스에서 비행사양성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이 두 학교는 모두 재정난으로 폐교되었다. 이외에도 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을 전개하기 위해 국내 비밀결사 조직과 연계하였는데, 대한독립애국단(일명 철원애국단)을 비롯하여 조선민족대동단·대한민국청년외교단·대한민국애국부인회·대한국민회 등이었다. 또한 만주에서는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를 임시정부 군무부 산하로 편입시키는 한편, 서간도의 대한청년연합회 의용대·한국독립군비단·대한독립단 등을 통합하여 광복군총영(光復軍總營)을 조직하고, 주만참의부(駐滿參議府)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한편, 임시정부를 후원하기 위한 가장 큰 재정기지는 재미한인사회였고, 재미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구는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였다. 3·1 운동 직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한 김규식(金奎植) 등 대표단에게 3,500달러의 경비를 송금하였고, 안창호를 상해 임시정부로 파견하면서 2만 달러의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이후 재미한인사회는 약 1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임시정부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19년 말부터 임시정부의 재정을 담당하던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제에 의해 발각되기 시작하였고, 1920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에서 승리한 이후 만주지역 독립군 조직이 러시아 자유시(自由市)로 이동하면서 임시정부의 활동은 1920년 말부터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3 임시정부 개혁을 둘러싼 국민대표회의 개최와 민족유일당운동

통합 임시정부가 위기에 처한 것은 독립운동 방략을 둘러싼 갈등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임시정부는 출범 직후 이승만의 외교 활동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외교 활동은 별다른 소득이 없고, 이승만이 미국에게 한국의 위임통치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시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1921년 2월 박은식(朴殷植)·김창숙(金昌淑) 등 14인이 임시정부의 무능과 분열을 비판하면서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새롭게 임시정부를 개혁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어 일찍이 이승만과 임시정부의 외교노선에 반대하여 북경에 자리 잡은 신채호·박용만(朴容萬)·신숙(申肅) 등은 1921년 4월 군사통일주비회(軍事統一籌備會)를 결성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 소집을 결정하였다. 게다가 같은 해 5월 초 만주 액목현(額穆縣)에서 평소 임시정부를 지지하던 여준(呂準)·김동삼(金東三) 등 만주지역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이승만의 사임과 임시정부 개조를 요구하면서 국민대표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이에 반발한 이승만은 임시정부에 머문 지 불과 6개월 만인 1921년 5월 상해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국제적 상황과 재정문제, 국민대표회의를 둘러싼 찬반논쟁 등으로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 1월 개최되었다. [관련사료](#) 국내외 대표 140여 명이 참가한 국민대표회의는 1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63회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거듭하였다. 이 회의의 가장 주된 이슈는 임시정부를 개혁

하여 독립운동세력을 강화하자는 주장(개조파)과 임시정부를 해체한 뒤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주장(창조파)이었다. 그러나 개조파와 창조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을 지지하는 정부옹호파의 반발로 정부개조안마저 기각되자, 16일 개조파가 국민대표회의의 탈퇴를 선언하였고, 창조파 역시 6월 3일 '한(韓)'이라는 국호의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결정함으로써 국민대표회의의 막을 내리고 말았다. 국민대표회의의 폐막 이후 임시정부는 사실상 정부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국민대표대회 이후 각지 대표들과 독립군 세력이 이탈한 까닭에 임시정부는 일개 독립운동단체와 다를 바 없는 형국이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자 지휘부인 임시정부를 쇄신하고 임시정부 분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했다. 그리하여 1925년 3월 임시의정원은 이승만을 탄핵하였으며, 7월에는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개헌작업을 통해 지도체제를 내각책임제로, 내각 수반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령(國務領)'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국무령으로 선임된 인사들이 취임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1927년 다시 국무위원제라는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였다. 국무위원제는 1940년 10월 주석제로 변경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임시정부는 1926년 5월 안창호의 제창으로 민족유일당운동을 전개하였다. 민족유일당운동은 중국국민당의 '이당치국(以黨治國)'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당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는 원리였다. 즉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독립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보다는 정당 형태가 더 낫다는 판단이었다. 1926년 10월 안창호는 러시아의 원세훈(元世勳) 등 북경의 좌파세력과 통합하여 대독립당북경촉성회(大獨立黨北京促成會)를 결성하였고, 1927년 3월 한국유일독립당상해촉성회(韓國唯一獨立黨上海促成會)가 조직되면서 좌우합작을 이루어냈다. 이를 계기로 상해·광주·무한·남경 등에서도 촉성회가 성립되자, 중국 각지의 촉성회를 연합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1927년 11월 상해에서 '한국독립당관내촉성회연합회(韓國獨立黨關內促成會聯合會)'를 개최하여 유일당 결성을 위한 작업을 논의하였다. 좌우파가 다 참여한 이 모임은 각자 자신의 위상과 역할 강화, 독립운동의 노선 차이 등으로 인해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

4 유랑생활로 버틴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운동

1920년대 민족유일당운동 실패 이후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세력들은 각자의 이념과 노선에 따라 정당을 조직하였다. 1930년 1월 김구(金九)와 조소앙(趙素昂) 등은 임시정부 정당인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을 창당하였다. 1931년 7월 한인과 중국인 사이의 수로(水路)문제를 둘러싼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과 9월의 만주사변(滿洲事變) 등으로 한·중 양국민 간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시정부가 선택한 것은 특무조직을 결성하여 의열투쟁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1931년 10월 임시정부는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을 조직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중 가장 대표적 성과는 1932년 1월 이봉창(李奉昌)의 일왕 저격 의거와 4월의 윤봉길(尹奉吉)의 홍구공원 의거였다. 이 의거로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에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으나, 이 일로 인해 임시정부는 일제의 추적을 피해 13년간 머물던 상해를 떠나 유랑길에 오르게 된다. 1932년 5월 항주(杭州)로 피신한 임시정부는 진강(鎮江, 1935. 11)·장사(長沙, 1937. 11)·광

주(廣州, 1938. 7)·유주(柳州, 1938. 10)·기강(綦江, 1939. 3)을 거쳐 1940년 9월 중경(重慶)에 이르기까지 8년간 장정생활(長程生活)을 하였다.

이후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한국독립군 세력도 중국 관내로 이동하였다. 관내 이동후 한국독립운동 세력은 일제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분산된 독립운동단체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결성된 조직이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이었다. 이 동맹은 1935년 7월 민족혁명당(民族革命黨)으로 발전적으로 해소되었다. 통일전선의 일환으로 결성된 민족혁명당은 만주와 중국 관내와 미주지역의 독립운동단체 뿐 아니라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단체도 참여하는 등 좌우연합 정당이었다. 그러나 성립 직후 조소앙(趙素昂) 등이 탈퇴하여 한국독립당을 재건하였고 1937년 이청천(李靑天)의 조선혁명당 계열도 이탈하자, 민족혁명당은 다시 좌익세력만이 남게 되었다.

1937년 7월 중일 전쟁이 터지자, 임시정부는 8월 김구가 이끄는 한국국민당을 중심으로 민족혁명당을 탈당한 재건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 그리고 미주세력인 현순(玄楯)의 대한인국민회, 이승만의 대한인동지회(大韓人同志會) 등 6개 단체를 연합하여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일명 광복진선)를 조직하였다. 광복진선(光復陳線)은 중국과의 연합작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임시정부 옹호를 내세웠다. 또한 1938년에는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를 조직하여 군사활동을 추진하였다.

한편, 민족혁명당은 우익세력 이탈 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뒤, 좌파세력인 조선민족해방동맹·조선혁명자연맹·조선청년전위동맹 등을 규합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였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은 1938년 10월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를 결성하였다. 이는 우익세력과 마찬가지로 중국군과의 연합작전을 통한 대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중국 국민당 정부의 강력한 권유로 1939년 8월 중국 사천성 기강에서 다시 좌우합작을 위해 한국혁명운동통일7단체회의(이른바 7당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통일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조선민족해방동맹과 조선청년전위동맹이 이탈하고 남은 5개 정당이 통일회의를 개최한 결과, 9월 전국연합전선협회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김원봉(金元鳳)이 이끄는 민족혁명당이 탈퇴하자, 임시정부는 1940년 5월 우파세력인 한국국민당, 재건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3당을 합당하여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임시정부의 단일정당을 만들었다.

5 한국광복군 창설과 국내진공작전 수립

임시정부는 중경에 안착한 후인 1940년 9월, 정식 국군인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을 창설하는 한편, 10월에는 집단지도체제였던 국무위원제에서 1인지도체제인 주석제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당·정·군 체제를 완성하였다.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습격하자, 이를 후인 10일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는 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후일 연합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 후 1942년 김원봉이 임시정부에 합류함으로써 임시정부는 다시 좌우합작정부로 탄생하였다. 5월 김원봉이 한국광복군 부사령으로 임명되고, 7월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됨으로써 좌우합작이 성사되었다. 이에 임시의정원은 1942년 8월 선거를 단행하여 좌익계열 인사 14명을 선출하였고, 1944년에는 주석·부주석 체제의 2인 공동지도체제로 전환하는 등 의회와 정부 모두 좌우연합정권으로 균형을 맞추었다.

3지대로 구성된 광복군의 주요 목표는 연합군과 공동으로 대일항전을 전개하는 것과 국내진공작전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1943년 8월 광복군은 공동작전의 일환으로 영국군과 인도와 버마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였다. 1945년에는 광복군 선발 요원들이 국내진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 전략첩보기구인 OSS에서 3개월간 군사훈련을 받고 국내침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제가 항복하기 불과 5일 전인 8월 10일, 임시정부는 OSS와 국내진공작전인 '독수리작전'을 추진하였다. 김구 주석은 8월 4일 제1기생이 특수훈련을 마치자 광복군 총사령 이청천과 함께 서안으로 가 OSS 책임자인 도노반 소장과 함께 광복군을 국내에 침투시켜 일제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점령한다는 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바로 이때 일제의 항복소식이 전해지자, 이 소식을 들은 김구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느낌"이었다고 회고하였다. 김구는 바로 광복군 제2지대 본부로 달려가 이범석 장군과 협의해 광복군 대원 중 선발요원을 정진대(挺進隊)로 편성하여 국내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OSS도 동의하였다. 이범석(李範奭)·김준엽(金俊燁)·장준하(張俊河) 등은 미군 비행기 C-47편으로 8월 18일 여의도비행장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이 이들을 포위하고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까닭에 부득이 다시 중국 서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8월 18일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환국을 결정하였다. 이어 9월 3일에는 정부 형태로 환국한 뒤, 국내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하여 과도정권을 수립하고 임시정부의 모든 것을 과도정권에 인계한다는 당면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임시정부는 중국 내 한인들의 보호와 귀국을 돕기 위해 한교선무단(韓僑宣撫團)을 조직하는 한편, 귀국 후 수립될 정부의 건군(建軍)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교선무단은 10월부터 중국 각지에 파견되어 한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동남아 지역은 중국 외교부에 부탁하여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교선무단은 임시정부 한국 직전, 주화대표단(駐華代表團)으로 개편되어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주중대사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건군 작업은 지원병·학병·징병 등으로 끌려와 일본군에 배속된 한인 청년들을 광복군에 편입시켜 광복군 조직과 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임시정부는 광복군으로 하여금 중국정부의 일본군 무장해체에 협조하면서 일본군에 있던 한인 청년들을 광복군에 편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북경에 있던 박정희(朴正熙)·이주일(李周一)·신현준(申鉉俊) 등 만주군 장교 출신들도 광복군에 편입되었다. 임시정부는 이들을 모아 임시로 부대를 편성하였는데, 이를 잠편지대(暫編支隊)라고 하였다. 또한 임시정부는 만주 독립군 출신으로 국내에서 대한민국군준비위원회를 결성해 건군 준비를 하던 오광선(吳光鮮)을 광복군 소장으로 임명하여 국내에서도 건군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6 환국과 통일정부 수립 노력

이러한 준비 끝에 임시정부는 환국하였다. 해방된 지 석 달 만이었다. 임시정부는 정부 차원의 환국 방침을 결정한 바 있었지만, 중국과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적극 지원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었으나, 미국은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던 까닭에 정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임시정부 내에서 찬반논란이 있었으나 부득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미국이 취한 임시정부 귀국 지원 조치는 15인승 비행기 1대 뿐이었다. 때문에 임시정부 요인들은 2진으로 나누어 귀국해야만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인 김구와 김규식(金奎植)을 비롯한 15명이 11월 23일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였고, 외무부장 조소앙과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洪震) 등은 12월 1일 김포비행장이 아닌 전라도 군산비행장에 도착하여 다음날 서울로 올라와야만 했다. 더구나 미군정이 임시정부의 환국을 알리지 않았던 탓에 환영인파조차 없었다.

임시정부는 환국 직후 정치공작대와 행정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내무부 산하에 두었다. 당시 내무부장은 신익희(申翼熙)였다. 정치공작대는 임시정부 조직망 확대와 국민적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활동하였고, 행정연구위원회는 향후 수립될 정부 수립에 필요한 행정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1946년 2월 정치공작대 조직은 면 단위까지 조직을 완료하여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12월 28일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해 신탁통치를 결의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임시정부는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신탁통치 반대를 결의하였다. 이어 4개국 원수(元首)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발송하는 한편, 정당·종교·언론 등 각 단체 대표들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반탁투쟁을 주도하였다. 이 원칙에 따라 정치공작대와 행정연구위원회는 반탁시위운동을 준비하는 한편, 12월 31일 내무부장 명의로 포고문 「국자1호」와 「국자2호」를 발표하여 사실상 정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포고문을 본 미군정은 임시정부가 미군정의 정권을 빼앗으려는 '임시정부의 쿠데타'로 규정하고 신익희를 체포하여 신문하였다. 이를 계기로 임시정부는 미군정의 감시와 견제를 받게 되는 한편, 더 이상 정부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

환국 직전 임시정부는 과도정권 수립을 결의한 바 있었다. 그리하여 1946년 2월 과도정권 수립을 위해 각계 인사 195명을 규합하여 비상국민회의를 조직하였다. 그런데 비상국민회의 최고정무위원회가 이승만과의 결탁을 통해 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으로 개편하면서 미군정의 자문기관이 되었다. 이는 임시정부를 해체하려는 미군정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였다. 이 일로 김원봉·장건상(張健相)·김성숙(金星淑) 등은 임시정부를 탈퇴하였고, 임시정부도 민주위원을 부인하면서 비상국민회의와 민주 의원은 서로 다른 단체임을 선언하였다. 비상국민회의는 과도정권 수립을 위해 다시 좌우합작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자, 결국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와 민족통일본부와 통합을 추진하여 1947년 2월 국민의회를 결성하였다. 국민의회는 1947년 3월 과도정권을 수립하고 주석에 이승만, 부주석에 김구를 추대하고 국무위원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이 과도정권에 불참한데다가 과도정권의 존재마저 무시하는 바람에 국민의회는 9월 대한국민회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대한국민회 역시 이승만이 주석직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1947년 들어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한국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갔다. 유엔은 한국에서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정부를 수립하면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총선거 실시와 정부 수립을 감독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였다. 유엔위원단은 귀국 후 북한지역을 방문코자 하였으나 소련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이승만·김구·김규식·김성수(金性洙)를 만나 정부 수립을 둘러싸고 논의를 하였다. 이승만

과 한국민주당은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반면 김구와 김규식 등 임시정부 세력은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엔위원단은 1948년 2월 임무수행이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임시정부 요인들은 남한의 단독선거 불참을 선언하고 북한에 남북지도자회담을 제의하였다.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에 참가한 김구·김규식 등은 통일된 민주정부 수립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는 남과 북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은 유엔위원단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